

정부, 다음달 7일 일자리 추경안 제출

민주당 6월 27일 통과 목표 여소야대...신속처리 불투명 야권, 재원 등 적극 검증 예고

정부가 다음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경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은 다음달 27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추경안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은 그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다. 추경은 그 특성상 신속성이 생명기에 국회에 오래 계류될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106일 동안 처리가 안 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은 불과 3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2004년 서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안은 12일, 2005년 경기불황 대응 추경안은 47일이 걸렸다. 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 추경안도 11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됐다. 2008년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안은 처리되는 데 90일이나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3년 경기침체 대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추경안 처리 소요 기간은 각각 30일, 19일, 18일이 걸렸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무산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지만 결국 38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 처리의 관건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력과 야당의 협조 태도에 달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경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구체적인 내용 없는 (추경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공개되면 항목별로 집요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洪 “위성정당”...바른정당 “괴짜의 망언”

보수 주도권 싸고 신경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바른정당 이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을 놓고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 모두 대선 패배 후 당 체제 정비를 위한 지도부 선출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수의 적통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홍 전 지사의 ‘바른정당 위성정당’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오간 것이다.

그동안 바른정당을 ‘강남좌파’라고 비판해온 홍 전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우파 궤멸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지금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당시 최고위원이 당권 장악을 목표로 자신을 흔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비판

했다.

홍 전 지사는 29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바른정당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성정당으로 존치시키면서 우파 분열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효용 가치가 없다면 바른정당 일부 인사는 흡수하지만 가치가 없는 인사는 버린다”고 적었다. 이어 바른정당을 지목해 “얼치기 강남좌파들이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한국당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이 건전보수를 가장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른정당은 “자기 편의적 야집”,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의원전체회의에서 “괴짜 정치인의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다”며 “자기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모두 좌파가 되는 자기 편의적 야집이 경이롭다”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내달 7~8일 실시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는 청문회 종료 후인 다음 달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자유한국당의 김도읍·국민의당의 이상돈·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각각 인사청문특별위 간사를 맡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재현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진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백재현 (경기 광명시 갑)의원이 29일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백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56표 가운데 234표 찬성으로, 예결위위원장에 백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김현미 의원에 예결위위원장을, 백 의원에 윤리위원장을 맡기면서 이번에 백 의원이 예결위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훈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국정원 댓글사건 조사할 것”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당시 문 후보)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는 받

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재직 시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다”며 당시 교류했던 북한 인사들에 대해 “아직 책임 있는 위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둔 그는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취임하게 되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기자 glee@

그는 이 밖의 국정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했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2015년 국정원이 비밀리에 이탈리아에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종현기자 glee@

3월 백의종군...전해철, 법무 입각설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사진) 의원은 29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물러나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물러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3철’로 꼽혀온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통합·화합의 정부를 (추구) 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치러진 조기 대선이고 국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해외로 출국한 양 전 비서관, 이 전 수석에 이어 3철 모두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셈이 됐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인사 원칙’과 관련, “5대 원칙이 좀 더 정치하게 그 기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5대 인사원칙만을 발표하고 구

체성이 결여돼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싶다”며 “청와대가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이 기용될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아주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사무총장 이태규·수석대변인 손금주 의원

국민의당은 29일 당 사무총장에 이태규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손금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초선의 이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과 국민의당 전략홍보부장 등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손 의원은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초선 의원으로, 당과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국민의당은 또 정호준 서울시장위원장과



이태규 손금주
전진영 부산시의회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